

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유지해야”

“2015년 대법원 선고 기준, 국토정보지리원 경계가 맞아” 경남도 2015년 12월 현재에 “해상 경계 조정”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의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남도의회가 현재의 해상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6월 전남해역을 침범·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부들에 대한 최종심에서, 기준점으로 삼은 1973년 발행된 국토정보지리원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지역 어민들은 현재가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이면 막대한 어업 손실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13일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일동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경남도 권한쟁의심판 관련 현행 해상경계 유지 촉구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해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 잡을 것으로 안다”며 “현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호남 바다 경계 다툼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종식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2015년 12월 현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개됐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6월 전남해역(여수)을 침범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부들에 대한 최종심에서 “국토정보지리원이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도(道) 경계로, 이를 침범한 조업은 유죄”라고 판결했는데도, 경남도가 대법원이 정한 해상 경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툼을 현재까지 끌고 올라간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경남간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 양 지역의 해상경계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원들은 “현행 해상경계선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단순히 양 지역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확정한다면 그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정전벽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사도, 사군 간 경계선을 단순히 등거리 중간선으로 확정해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경남도를 향해서는 “여지 주

광주시, 지역 중기 온라인 판로 지원

쿠팡·위메프·우체국쇼핑 입점 16일까지 50여개 업체 모집

광주시는 “지역 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온라인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쿠팡, 위메프, 우체국쇼핑 등과 함께 이달 중으로 각 쇼핑몰별로 입점을 희망하는 50여개 지역 기업을 선정해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고, 기획전 운영 등을 통해 기업 판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구매에 적합하고 온라인 쇼핑물 주 고객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업체로, 광주시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쿠팡, 위메프, 우

체국쇼핑 중 1개 이상 쇼핑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쇼핑몰에 이미 입점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입점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이메일(sy1234@gepa.or.kr) 제출하면 된다. 정창균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온라인 입점 지원 사업을 통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2년간 ‘중소기업 위크’ 행사를 개최해 지역 우수제품 전시회, 판매전 등을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 판로 지원을 시작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최대 주주 그린카진흥원장 공모 7명 지원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의 최대 주주인 광주 그린카 진흥원 5대 원장 공모에 7명이 지원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기업 3명, 대학 1명, 자동차 관련 학회 1명, 연구기관 1명, 시 산하 기관 1명 등 다양한 출신의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3년 계약으로 연봉은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1년 단위로 계약한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그린카 진

흥원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기업 지원 기관이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를 대리해 483억원을 투자한 1대 주주다. 내년 양산을 목표로 자동차 공장을 신축 중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인 데다가 전임 원장이 방만 운영 등을 지적받고 불명예 사직했다는 점에서, 신임 원장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시·군 24시간 비상근무 유지
철새도래지 차량 통제구간 지정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방역 관리에 들어갔다. 올해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A형이 잇따라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돼 겨울철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년차 비발생을 달성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근무체

계를 유지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31개소)도 지정해 차량에 부착된 GPS를 통해 이동통제에 들어갔으며,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 134대를 총 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주변도로와 인근농장 303개소를 매일 소독에 나선다. 도내 철새도래지 20곳에 대한 차단방역 홍보를 위한 입간판 25개와 현수막 61개, 발판소독소 41개 등도 설치했다. 특히 순천 순천만, 영암 영암호, 해남 금호호·고천암 등 주요 철새도래지 4곳에는 이동통제소소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오리농장 주변으로 생석회 차단벨트를 조성하고, 가금류 출하 전 검사와 주 1회 도축장 검사도 강화했다.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

간의 휴지 기간을 두며, 신규 오리 입식은 3단계의 입식 승인을 거친 후 입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내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비발생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10월중 소·염소 72만두에 대해 백신 일제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 생분뇨의 타시도 반출입을 제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방역교육은 12월까지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에 들어갔다. 아울러 구제역 혈청검사를 확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백신 재접종 후 확인검사 등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광산구 내년 생활임금 1.6% 인상 시급 1만520원

광주 광산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20원으로 13일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353원보다 1.6%(167원) 인상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800원 많은 금액이다.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지역 내 가계 지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광산구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위·수탁 계약을 맺은 민간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한 달 평균 근무 시간인 209시간을 일하면 월급으로 219만8680원을 받을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전남도, 28만가구 대상 ‘인구주택총조사’

전남도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도내 2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올해는 70여명의 공무원과 1800여명의 조사원이 투입돼 사전조사(10월)와 본조사(11월)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전조사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과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본조사 기간에 참여가 어렵거나 비대면 방식을 선호한 도민들은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www.census.go.kr)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사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며, 통계조사원이 비대면 방식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에 면접조사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에 거주중인 주택의 규모, 특징을 파악·분석하는 조사로, 국가와 지역의 중요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항목 중 성별, 연령 등 16개 항목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경제활동, 교통수단 등 55개 항목은 표본조사가 이뤄진다. 명칭만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와 지역의 현제를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국가조사인 만큼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